

기호 10

공약순위 1 : 한·미·일 군사동맹강화와 한·일 핵무기 공동개발

- 목표
 - 국방분야에서 한국, 미국, 일본의 동맹강화를 통해 완벽한 방위시스템 구축
 - 일본과 핵무기 공동개발을 통한 핵무장화
- 이행방법
 - 한·미·일 연합훈련 강화
 - 일본 요코스카 항에 주둔 중인 미국함대의 제주도 이전 추진
 - 일본과의 핵무기 공동개발을 통해 핵무기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인 압력 약화
 - UN의 아시아본부를 DMZ에 유치
- 이행기간
 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한·미·일 연합훈련 강화와 일본과의 공동핵무장 추진에는 별도의 많은 예산이 불필요

공약순위 2 : 공영방송 폐지와 빅테크 언론검열 금지

- 목표
 -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공정한 방송환경 확립
 - 방송전파를 산업용으로 사용하여 정보통신사업 활성화 촉진
 - 공영방송 폐지에 따른 광고물량의 민간방송사 이동으로 민간방송사 수익 증대
 - 대형통신사들에 의한 언론검열 불허
- 이행방법
 - KBS가 사용중인 3개 채널(제1, 제2, 교육방송)의 주파수를 국가가 회수
 - 회수한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임대

-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
-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이 자의적으로 이용자들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말소시키지 못하도록 입법
- 이행기간
 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회수된 KBS 3개 채널 주파수 경매를 통해 마년 수조원대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방송문화진흥회가 보유한 MBC주식의 70%를 매각하면 약 1조 가량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, 방송문화진흥회는 이 자금으로 민간방송사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

공약순위 3 : 법원 내 사조직 폐지, 사전선거 폐지, 수개표 실시

- 목표
 - 공정한 사법제도 확립
 -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
- 이행방법
 -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사조직을 철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
 - 주체적인 실행방법은 김영삼 대통령이 군대 내 하나회를 해체시킨 방법을 참고
 -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확대
 - 투표종료 직후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시
- 이행기간
 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법원 내 사조직 해체는 재원조달이 불필요
 -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투표종료 직후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실시하면 기존의 선거관리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음

공약순위 4 :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풍부한 민간주택공급

- 목표
 - 기존 대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풍부한 민간주택공급
 - 대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첨단기술(설계, 시공, 자재, 관리) 사용을 의무화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,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주택 환경 구현
 - 첨단도시의 탄생으로 고급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
 - 신도시 개발 억제로 국가예산(토지보상 등) 절감
- 이행방법
 - 서울의 강북 등 낙후지역 용적율을 2000~3000%로 상향
 - 민간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고, 정부는 가능한 민간업자의 요구를 수용(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)
 - 국민연금을 투자자로 참여시켜 개발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회수 시스템 구축
- 이행기간
 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민간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음

공약순위 5 : 대학의 완전 자유화 보장과 사학재단 자율 정리

- 목표
 - 대학에 대한 정부간섭을 최소화하여 대학이 미래산업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응
 - 대학교육 자율화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삭감
 - 인구감소에 따라 사학재단이 스스로 재단을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
- 이행방법
 - 정부가 대학의 신입생선발, 학과개설, 등록금 결정 등에 간섭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철폐
 - 필요하다면 대학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정부는 대학에 지원한 부분만을 관리 감독

- 인구감소에 따라 사학재단이 일부 자산을 영리목적의 개인(사학재단 설립자) 또는 법인에 귀속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
- 이행기간
 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
 - 특별법 제정으로 사학재단이 줄어들면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의 감축이 가능

공약순위 6 : 연금개혁

- 목표
 -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교원연금, 사학연금 등을 국민연금으로 통합
 - 연금에 사회부조적 개념 도입으로 연금수입 확대
 - 지속 가능한 연금시스템 구축
- 이행방법
 -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, 교원,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 (공무원연금, 교원연금, 사학연금은 신규가입자 없음)
 -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납입 (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 납입)
- 이행기간
 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납입케하여 연금수입을 확대
 - 초과세수가 발생하면, 정보는 우선적으로 신규가입자가 없는 공무원연금과 교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에 출연
 - 국민, 교원, 사학, 군인 연금납부액을 상향하여 조정(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)

공약순위 7 :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95% 정부지불보증

- 목표

- 젊은 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급
- 결혼을 적극 권장하여 저출산 극복
- 이행방법
 - 신혼부부가 구입하는 생애 최초주택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구입가의 95%를 지불 보증
 - 예를 들면, 신혼부부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%인 5천만원만 본인이 부담, 나머지 9억5천만원에 대한 지불을 보증
 - 금리는 '기준금리 + 시중 은행 마진'을 적용
 - 주택금융공사는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마진을 제시하는 금융사를 선정
- 이행기간
 - 취입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주택구입가의 95%에 해당되는 금리를 부담해야하므로 자신의 소득에 비해 무리한 가격의 주택 구입은 자제할 것인. 따라서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공약순위 8 :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통한 거짓 세력의 응징과 적폐수사로 수감된 인사들의 석방과 사면

- 목표
 - 소위 적폐수사로 단죄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통한 탄핵과정의 불법성 확인으로 사법정의 실현
- 이행방법
 -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로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사면
 -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성 규명에 관한 특별검사임명
 - 국회 탄핵소추과정의 정당성과 적법성 검토
 - 공정하고 정확한 태블릿PC 포렌식검사
 - 박영수 특검의 수사 적법성 검토
 -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정 적법성 검토
- 이행기간

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탄핵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활동에 수십 억의 세금이 필요

공약순위 9 : 5·18 역사왜곡처벌법(5·18민주화운동특별법) 폐지와 5·18유공자 공개

- 목표
 - 국민의 기본권 (언론의 자유)를 침해하는 5·18민주화운동특별법의 폐지
 - 5·18 유공자 공개를 통하여 가짜 유공자 색출
- 이행방법
 - 국회를 통한 5·18민주화운동특별법 폐지
 - 일정 기간을 통해 5·18 유공자 중 부적격자는 스스로 신고(비공개)하여 유공자자격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
 - 부적격자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5·18명단을 공개
 - 공개된 명단에 한해서 그 자격을 다시 검증
- 이행기간
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가짜의 5·18 유공자를 걸러냄으로서 예산을 절감

공약순위 10 : 중대재해처벌법 폐지와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, 탈원전 정책 폐기

- 목표
 - 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
 -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
 -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원자력산업을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
- 이행방법
 -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통해 폐지
 - 노동이사제 도입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

- 원자력 발전소 폐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고,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
- 이행기간
 - 취임 후 즉시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한국전력이 자금을 조달함